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TEL 02-3460-7314 FAX 02 3460 7777

‘글로벌 이슈 페이퍼’ 정보는 전 세계 122개 무역관에서 오는 실물 경제정보를 취합 분석하고 현안 이슈가 발생한 해외 현장의 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우리나라 무역 투자 활동을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이슈 요약

인도네시아 대선 결과 및 향후 경제정책

- 7월9일 실시된 인도네시아 대선에서 조코위(Joko Widodo) 후보가 프라보워(Prabowo) 후보를 누르고 최다 득표 획득에 성공. 조코위 후보는 총 유권자의 53.2%의 득표율을 기록하였으며 프라보워 후보는 46.8% 득표율을 기록
- 7.9일 선거 이후 표본개표 결과를 발표한 기관들이 일부는 조커위, 일부는 프라보워 후보의 승리를 발표하면서 조사기관의 신뢰성,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았음.
- 조커위의 승리가 확정될 경우 인도네시아가 2004년 대통령 직선제를 채택한 후 첫 번째 정권교체를 하는 것이 됨. 이번 선거는 인도네시아 대표 명문가 출신의 프라보워 후보와 가구 사업으로 자수 성가한 정계 신인간의 대결로서,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인도네시아 경제를 이끌 새로운 리더쉽을 희망한 것으로 분석
- 경제정책으로는 조코위 당선인이 현 정부의 보호주의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산업 보호, 수입규제 정책 등의 기조도 계속될 전망. 외국인투자 정책은 현 정부의 개방정책을 유지하면서 상호주의 원칙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신정부는 인니 경제성장을 제약하고 있는 인프라 부족 해결을 위해 도로, 항만, 공항, 철도, 교량 등 각종 인프라 확충에 주력할 계획
- 우리기업은 인니 신정부의 경제정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특히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대규모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참여를 통한 적극적인 시장진출 요망

인도네시아 대선결과 및 전망

I 인도네시아 대선 결과

1. 표본개표 결과

- 치열한 접전 끝에 개혁주의, 친기업 성향인 조코 위도도(조코위) 당선
 - 인도네시아 선거관리위원회, 53.19%의 득표율로 조코위 후보 당선 발표

조코 위도도 (조코위) (부통령 : 유습 갈라)		프라보워 수비안또 (부통령 : 하따 라자사)	
	53.19%		46.81%

- 1998년 민주화 이후 세 번째 치러진 대선 중 사상 가장 치열한 접전 기록
 - 조코위 후보는 선거활동 초반에는 프라보워 후보를 두 자릿수 이상의 지지율 격차를 보였으나 선거 직전 두 후보간의 지지율 차이가 2~7%에 불과했음.
 - 9일 선거 직후 표본개표 결과를 발표한 기관들이 일부는 조코위, 일부는 프라보워 후보의 승리를 발표하면서 조사기관의 신뢰성,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았음.
- 조코위 후보는 자수성가한 사업가로 청렴한 이미지와 지방정부에서 정책 추진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권위적이고 부정부패로 인도네시아 국민의 신임을 잃은 기존 정치 세력으로부터 차별화하며 새로운 정치인물로 부상

2. 대선결과 의의

○ 직선제 이후 첫 정권교체로 문민정부의 탄생

- 1998년 수하르토의 32년 독재 이후 2004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된 후 3번째 치러지는 대선으로 직선제 이후 최초의 정권교체라는 의미가 있음
- * 첫 직선제 대통령인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은 2009년에 재선에 성공, 연임 제한 규정으로 이번에는 출마하지 못함.

- 조코위-유습 칼라 당선자 둘 다 사업가 출신으로 인도네시아에 첫 문민정부가 탄생함. 그 동안 군인 출신이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 이유는 수하르토의 오랜 군부 통치 및 국가통합에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었음. 그러나 유도요노 대통령 최초의 직선제로 당선 이후 인도네시아 정치 안정성은 지속적으로 개선됨.

○ 전환점에 선 인도네시아 경제를 이끌 수 있는 리더 선출

- 인도네시아 경제는 원자재에 대한 수요 증가 및 민간소비의 안정적인 유지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꾸준히 6%대의 성장률을 달성했으나, 2013년부터 수출 둔화 및 고정 투자 하락 등 대내외 요인으로 GDP 성장 둔화 추세임.
- * 2013년 2/4분기 GDP 대비 4.5% 경상수지 적자 기록, 2014년 1/4분기 GDP 성장 5.21%로 둔화
- 인도네시아가 '중진국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구조적인 개혁 단행할 수 있는 인물이 새정부의 리더로 선출될 것으로 국내외적으로 기대

○ 이번 선거의 키워드는 경제 민족주의 및 종교

- 조코위 및 프라보워 모두 인도네시아 자주권 확보, 강력한 자급자족 경제 구현을 주장하며 민족주의 및 보호주의 경제 공약 제시함. 두 후보 모두 현 정부보다는 국수적이고 민족적인 경제 정책을 추구하겠다고 표명

- 하지만 조코위 당선인은 외국인투자에서 상호주의 원칙, 외국인의 국내 자산 규제를 통해 보유하는 등의 원칙 주장함에 따라 프라보워보다는 시장 친화적인 인사로 평가 받고 있음.
- 지난 4월 총선에서 이슬람 정당들의 선전에 따라 이슬람 유권자의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 조코위 후보가 싱가포르 출신의 중국인이고 이슬람이 아닌 기독교 신자라는 소문에 시달리는 등 종교에 대한 논쟁 선거기간 동안 이슈화되었음.

○ 역대 대선 가운데 기존 권력계층과 정계 신인과의 치열한 접전

- 1998년 민주화 이후 치러진 대선 중 인도네시아 국민의 지지가 가장 첨예하게 양분되었음. 아울러 이번 대선은 목수의 아들로 성장한 가구사업가 출신인 조코위 당선자와 인도네시아 대표 명문가 출신인 프라보워 후보의 대결이었다는 점이 크게 주목을 받음.



- 1961년생, 자바섬 중부 수라카르타시 출생
- 인도네시아 가자마다(Gadjah Mada)대 삼림공학과 졸업
- 가구사업 도중 수라카르타시 시장 출마·당선 (2005.1)
- 자카르타 주지사 출마·당선 (2012.10)
- 비 명문가 출신에 소탈하고 저돌적인 정책추진으로 서민층 인기가 높음

조코 위도도 (PDI-P 당)

- 가구사업으로 자수성가한 조코위 당선인은 2005년 자바 중소도시인 수라카르타 시장직을 시작으로 정계에 입문. 2010년 자카르타 주지사로 당선된 이후 현장 위주의 친서민 정책을 펼치면서 친서민적, 개혁적 이미지를 얻게 됨.
- 한편 상대진영에 프라보워 후보는 인도네시아 대표 명문가 출신으로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음. 그의 할아버지는 국영은행인 BNI의 설립자이고 그의 아버지는 수하르토 하에서 경제장관을 역임한 경제학자임. 또한 프라보워 후보는 유도요노 대통령의 육군사관학교 동기이며 수하르토의 사위가 되면서 군 요직을 두루 역임함.

2

주요 경제 정책 전망

- 조코위, 인도네시아 자주권 확보, 강력한 자급자족 경제 구현을 주장
- 통상, 천연자원 등 주요 경제 및 외국인투자정책에 있어 보호주의 성향 띄고 있음.
- 단, 이는 국가의 자생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인프라 확충 등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산업은 개방하고 일부 산업은 규제를 통해 보호하겠다는 입장

1. 경제통상 정책

○ 통상정책, 현 정부의 보호주의 기조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조코위 당선인은 통상정책은 인도네시아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하며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서는 수입세, 인증제도 등의 비관세 장벽 강화 필요하다고 밝힘.
- * 현 정부는 중국-ASEAN FTA로부터 국내 산업이 피해를 크게 봤다는 입장이 지배적으로 인도네시아 정부 타 무역협정 체결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
- * 특정품목 가격, 수출물량을 제한할 수 있는 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신무역법, 신산업법 등 자국 산업 보호조항이 포함된 법이 이미 법제화되어 있음.
- 한편 유도요노 대통령이 강력하게 이끌고 있는 아세안경제공동체 (2015년 12월에 출범 예정)에 대해서는 조코위 후보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시장개방 전 인도네시아 노동인구의 경쟁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

○ 수입규제 정책 기조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2013년 2/4분기 GDP 대비 4.4%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함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 경상수지 적자 축소에 초점을 둔 정책 시행함. 이러한 정책 실행으로 2014년 GDP 성장이 5.21%로 둔화되었으나 인도네시아 정부는 중앙은행의 통화 긴축, 경상수지 축소를 위한 수입규제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 표명

2. 외국인투자 정책

○ 현정부의 외국인투자 개방 노선 유지

- 조코위 당선인은 인도네시아가 7%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가 필수라고 밝히는 등 외국인투자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어 현 정부의 외국인투자 개방 정책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

○ 단 외국인투자에 상호주의 원칙 도입,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일부 분야는 규제 강화

- 조코위 당선인은 인도네시아에서 운영되는 외국계 은행의 국가에서도 인도네시아 은행이 설립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에서 상호주의 원칙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
- 또한 조코위 후보는 아직 많은 국내산업이 경쟁력이 떨어져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국내 은행의 외국인 매입 규제 등 일부 산업 외국인 독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규제 필요하다고 주장

3. 기타 주요 이슈

○ 연료보조금 단계적으로 철폐

- 당선인은 국가예산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에너지(석유, 전기) 보조금을 취임 후 4년간 단계적으로 철폐하겠다고 밝힘.
- 단 조코위 후보는 보조금 폐지의 전제조건으로 보조금을 필요로 하는 계층을 고려하여 차등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힘. 특히 농업 어업 종사자에 대한 배려 강조함

○ 인프라 확충

- 조코위 당선인은 경제성장을 제약하고 있는 인프라 부족 해결하고, 인도네시아 섬 간의 연결성을 강화를 목표로 도로, 항만, 공항, 철도, 교량 등 인프라 확충 계획 발표
 - 에너지보조금 삭감을 통해 확보한 재원 활용 예정
 - 자바북해 해상고속도로, 통합대중교통시스템 등 대형 프로젝트 추진
 - 지방 서민 주택 및 아파트 건설

○ 자원 민족주의 기조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조코위 당선인, 올 초부터 시행된 미가공 광물 수출 제한 조치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석유·가스 및 에너지 정책 공약에서 가공된 광물 수출 확대를 위해 광물 가공 및 연관산업 정책을 공약에 포함함.
- 한편 인니 정부는 미가공 광물 수출 제한 조치 외에도 국내 수요 상승에 대비하여 천연가스도 단계적으로 수출을 금지하는 규제를 추진하고 있어 자원 민족주의 성향 강화될 수 있음을 시사

<조코위 당선인 분야별 주요 공약>

- ▶ 부패 척결 및 정부의 효율성
 - 입법, 행정 및 사법부 개혁, 투명한 정보 기술, 부패척결위원회의 역할 강화
 - 지방 정부 권한 일부 이양, 지방정부의 자율성 강화
- ▶ 재정정책
 - 세율 16%로 확대 / 정부부채 축소
 - 인프라 개발, 교육, 보건, 주택 분야에서 정부 배정 예산 확대
- ▶ 투자
 - 외국인투자에서 상호주의 원칙 적용 · 외국인이 국내시장 독점할 수 없도록 필요한 규제 도입
 - 정부부처, 중앙 및 지방 정부 간의 정책 일관성을 강화하여 비즈니스 환경 개선
- ▶ 제조업/무역
 - 천연자원 가공을 위한 제조업 육성 · 제조업의 해외 수입 비중 축소
 - 자바 외 지역에 5개에서 7개 산업단지 건설
- ▶ 에너지
 - 에너지 자주권 확보
 - 석유·가스 부분에 대한 투자 증진을 위해 탄력적 인센티브 제공
- ▶ 연료보조금
 - 5년간 점진적 연료가격 인상을 통한 보조금 삭감
- ▶ 인프라
 - 연 5% 물류비용 감축을 위해 육상, 해상, 항공 통합 교통 시스템 개발
 - 2,000km 고속도로 건설, 10개 신공항과 10개 신항만 개발
 - 연료 보조금 감축을 통해 연 240-300억 달러 절감 가능, 인프라 개발에 투자
- ▶ 의료 및 교육
 - 무료 정부 지원 프로그램인 'Healthy Indonesia Card'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공공 의료서비스 개선
 - 12년 무상 교육 (Smart Indonesia) 도입을 통해 교육의 질 및 수준 향상
- ▶ 농업
 - 농업 수출 개발, 식량 수입 조절 등을 통한 식량 자주권 확보
 - 농업 효율성 증대 (종자개량, 비료보조금), 농업 인프라 복구, CPO 수출세 감소

3

신정부의 주요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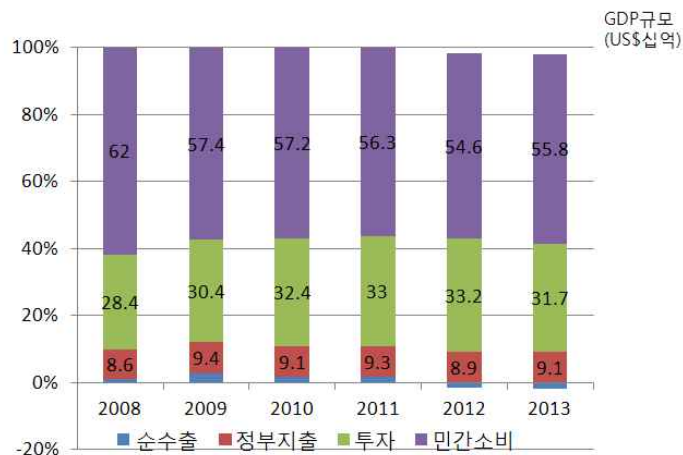
- 원자재 강세 및 안정적인 민간소비로 지난 10년간 고성장을 달성한 인도네시아는 작년부터 원자재 가격 하락, 미국 자산 매입 조치에 따라 성장 둔화되면서 자원 수출 의존형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부각됨.
- 10월에 출범하는 새정부는 인도네시아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야만 중장기적인 경제 성장 이끌 수 있고, 인도네시아는 '중진국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음.
- 조코위 당선인의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는 선거 유세 기간 중 확인되었으나, 정책 실현 방법 및 능력이 관건으로 부상

□ 신정부의 주요 과제

1) 경제성장 회복

- 인도네시아의 GDP 성장률 6% 후반에서 5%로 초반으로 하락, 민간소비가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한 반면 원자재 수출 둔화 및 실물자본투자 감소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
- * 2010년부터 연간 9%씩 증가하던 투자규모가 2013년에는 4.7% 증가에 그친 반면 민간소비는 5.2% 성장하면서 GDP 성장률의 50% 이상을 기여

부문별 인도네시아 GDP 구성비(%)



* 자료원 : World Bank

- 세계은행은 인도네시아가 ‘중진국의 함정’ 리스크에 빠질 위험이 있지만 풍부한 노동력, 유리한 인구구조 및 빠른 도시화율 등 고속 성장속도를 되찾을 수 있는 유리한 조건 갖추고 있다고 판단
- 새 정부는 인프라 확충, 부정부패 축소, 비효율적인 관료주의 개선, 노동 경쟁력 및 에너지 효율 강화 등 구조개혁 단행해야만 중장기적인 고속 성장 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

2)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

- 인도네시아 부정부패로 인해 자원 배분의 왜곡과 성장 제약 발생함에 따라 차기 대통령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의지가 매우 중요
 - 인도네시아 부패지수는 177개국 중 114위로 1위 덴마크의 9.1에 비해 3.2 기록, 2004년 2.0에 비하면 50%이상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낮은 편임.
- 유도요노 대통령은 정권 1기 동안에는 부패척결위원회(KPK)의 역할 강화 등 부정부패 척결에 적극적으로 임했다는 평가를 받지만, 집권 2기에는 체육부 장관, 민주당 재무담당자 및 부사무총장이 대형 부정부패 사건에 연루되면서 지지율 급격히 하락함.

3)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인프라 개선

- 인도네시아의 인프라투자 규모는 과거 10년 간 GDP의 약 3~4%에 불과, 중국(10%), 인도(5.7%) 등에 비해 낮은 수준임.
 - * 세계경제포럼의 2013년-2014년 148개국 글로벌 경쟁력 지수에서 인도네시아는 도로(78위), 항만(89위), 전력(89위) 등 인프라 부족이 인니 경제성장을 억제하고 있음.

- 조코위 후보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을 공약으로 내세워 인프라 투자에 대한 노력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실제 실행을 위해서는 현실적 제약 극복 필요
- 국가예산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에너지 보조금 축소를 통해 재원 확보 필요. 에너지 보조금 축소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으로, 유도 요노 대통령도 재임 기간 동안 몇 차례 보조금 제도 개혁을 시도했지만 실패하였고 2013년 6월 정권 말기에 가까스로 석유가격을 인상함.
- 토지 수용 및 보상 문제 해결 필요. 토지 문제가 인프라 사업 지연의 주된 요인이며, 중앙 및 지방정부는 집단 민원을 염려하며 최대한 개입을 자제하고 있음.
- 국가예산 부족으로 인프라 사업은 정부(재무부) 보증을 통한 PPP 사업 추진이 불가피하지만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인니 정부 대외채무 증가를 크게 우려하여 재무부 지급보증에 대한 신중한 입장 견지

4) 에너지 보조금 축소 문제

- 신정부도 재정적자를 축소하고 인프라, 교육, 보건 등 필요한 분야에 국가예산이 배정이 될 수 있도록 현 정부의 에너지 보조금 삭감 정책 지속 필요
- * 2014년 인도네시아 정부예산 중 210조 7300억 루피아(약 182억2천만달러)가 연료보조금으로 배정, 이는 인프라 투자 규모(206조 루피아)보다 큰 규모임
- 조코위 당선인은 연료 보조금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연료 보조금은 물가, 서민층 생활에 직결된 사항으로 실제 이행에는 많은 어려움 예상

5) 외국인투자 유치

- 현 유도요노 정부는 인도네시아 경제개발에 있어 외국인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치노력을 기울여 상당한 성과 달성한 것으로 평가 받음.
- 조코위 당선인은 인프라 확충과 제조업 성장을 위해 외자유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현정부의 외국인투자의 개방 노선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조코위 후보는 외국인투자 상호주의 원칙 및 자국산업 보호 등을 강조하고 있어 일부 산업 진입 장벽 높아질 것으로 예상
 - 조코위 후보는 인도네시아 기업들이 해외 진출에 장벽이 있듯 인도네시아도 해외기업의 대규모 국내 확장을 막기 위해 장벽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

□ 신정부의 정책 실현 능력 및 방법이 관건

- 조코위 정부, 여소야대로 정책 실행 능력에 큰 어려움 존재 가능
 - 현재 연정구도로는 조코위가 속한 투쟁민주당은 4개 정당 연합만 확보한 상황으로 이는 의석 점유율 37%(307석)에 불과
 - 선거기간 동안 프라보워 후보 지지를 선언한 골까르당, 민주당 등 주요 정당의 연정이 선관위 공식 발표 이후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나 의석수가 정당 간 분산된 구조로는 조코위 정부, 법안 처리에 난항 겪을 것으로 예상
 - 또한 인도네시아는 정책 실현을 위해 의회, 군대 등과의 견제와 조화가 필요하나 조코위 당선인의 약한 정치적 기반이 취약점으로 작용 가능

○ 주요 공약 실행할 수 있는 정부 예산의 부재

- 지난 4-5년간 인도네시아 정부는 예산의 약 85%를 연료보조금, 채무변제, 부채상환 등 고정 지출로 사용하고 있어, 연료보조금 축소 없이는 인프라 및 교육 등 정부가 지출 가능한 예산 비율은 10%에서 15%에 불과함.
- 한편 2014년에 6월에 발표된 인니 정부 수정예산은 연료보조금 배정 예산을 확대(210.7조 루피아→246.5조)함에 따라 신정부는 출범하기 전에도 재정 부담을 안고 시작

4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

□ 현지진출 기업 반응

- 조코위 당선인은 기업 친화적 이미지로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한 인물로 평가 받고 있음.
- 조코위 당선인은 자카르타 주지사 2년, 솔로 시장 7년 임기가 정치적 경험이 짧지만, 재임 시절 추진했던 정책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얻고 있음.
- 또한 조코위 후보는 프라보워보다 개인적인 인물 측면에서는 우위를 점하고 있고, 예측이 가능한 방향의 정책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어 인도네시아가 필요한 개혁을 일관성 있게 단행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
- 특히 인프라 개선·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기대감이 큼.
- 조코위 당선인의 대선 공약에 상당수 건설 공약이 포함되어 있음. 또한 조코위 당선인도 몇 차례 토론 및 유세 활동을 통해 인프라 투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임.

- 조코위는 인도네시아의 오바마 대통령으로 불리며 친서민적 및 청렴한 이미지를 보이고 있어 조코위 정권이 들어서면 부정부패 척결을 통한 기업 환경 개선이 기대
- 단, 약한 정치적 기반과 군부세력 통제의 어려움으로 조코위 당선인은 인니 정치 사회에서 취약한 입지임.
- 유습 칼라 부통령이 오랜 정치 경력으로 조코위의 약한 정치적 기반을 일부 보완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투쟁민주당 메가와띠 당수와 같은 기존 거물 정치인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
- 또한 현재로서는 민주당, 골카르당 등 주요 정당이 프라보워 후보의 정당을 지지하고 있어 조직면에서는 그린드라당이 월등한 우위를 차지하고 있음.

□ 기회 및 위협 요인

- 대규모 인프라 개발에 따른 진출 기회 확대
 - 예산 확보, 토지 보상문제 등의 제약이 해결되어야 하지만, 조코위는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어 국가예산 또는 지급보증을 통해 사업 추진이 있을 전망
 - 한국이 현 정부의 중장기 발전마스터플랜(MP3EI) 이행을 위한 주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고, 인니 정부는 한국의 발전 경험을 자국의 경제·사회 발전 모델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우리와의 경제협력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

- 경상수지 적자 축소 및 수입억제 정책에 따라 진입 장벽 강화
 - 인니 정부는 2012년 역사상 처음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면서 무역수지 적자 축소를 위해 수입규제 및 비관세 장벽 강화하는 추세임.
 - 조코위 후보는 국가 산업 인증 품목 확대 추진 등의 조치를 통해 자국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을 강조하고 있어 외국 제품의 유입 규제 강화할 것으로 전망

□ 한-인도네시아 교역 전망

- 한-인니 CEPA, 빠른 시일내에 협상 재개 필요
 - 2014년 인도네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FTA 협상 대부분이 중단된 상태로 한-인니 CEPA 협상도 이른 시일내 타결이 어려워졌음.
 - 인도네시아는 이미 중국 및 일본과 다자 및 양자간 무역협정을 체결한 상황으로 한국기업의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한-인니 CEPA 타결이 필요

〈 끝 〉